점자블록 위 장애물 버젓이 시각 장애인들 앞길 막는다

점자블록 위 장애물 적치 금지 '교통약자법' 개정 1년…광주 곳곳 둘러보니

물건·입간판·전동킥보드 등 뒤덮여 통행 방해에도 단속은 '0건' 자치단체·시민들 법 시행 몰라…피해는 장애인들에게 고스란히

'시각장애인의 통로'인 인도 위 점자블록에 장애물을 놓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지자체조차 법 시행 사실을 몰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15일 광주시의 번화가와 기차역 등지에서는 점자블록에 개인형 이동장치 (PM)가 주차되거나 입간판, 음식물쓰레기통 등이 놓여 시각장애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는 점자블록이 광장 출입구까지 연이어 놓여있었으나, '5·18 진상규명' 글자 조형물이 보도에 바짝 붙어 있어 통행이 불편한 상태였다. 또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를 위해 세운 공사장 가림막이 점자블록을 가로막고, 행사·공사 차량 3대가 점자블록 위로 잇따라 주차돼 있었다.

동구 충장로와 금남로 일대, 남구청이 있는 백운광 장 일대에도 점자블록 위에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 PM 여러 대가 주차돼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카페 거리'로 유명한 동구 동명동에서는 식 당 앞 점자블록에 1m 남짓 높이의 음식물 쓰레기통이 놓여 있었으며, 대인동 일대에서는 가게 입간판들이 점자블록 위에 줄줄이 세워져 있었다. 인도를 침범해 차를 세우는 이른바 '개구리 주차'를 하면서 점자블록을 가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광산구 광주송정역 일대에서도 점자블록 위에 세워 진 전동킥보드와 자전거가 여러 대 발견됐다.

이처럼 점자블록을 가로막고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는 모두 불법이자 과태료 징수 대상이다.

지난해 9월 15일부터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개정안'은 '장애인을 위한 보도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한 자에게는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방해' 행위에는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행위가 포함됐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물론 지자체조차 법 개정 1년 이 지나도록 "단속 사실을 몰랐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민 김동우(49)씨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실을 몰랐다"며 "평소 점자블록을 주의깊게 보지 않아서 잘 몰랐다"고 말했다.

박혜숙(여·70)씨도 "거리를 지나다 보면 자전거 등이 많이 올라가 있어 불편했는데, 과태료 대상이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광주 지역 지자체는 법 개정 이후 한 번도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점 자블록 통행을 방해해 '교통약자법 위반' 사유로 단속 을 한 건수는 0건이었다.

각 자치구는 법 시행 사실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 하고 있었으며, 광주시 북구의 경우 법령에 단속 권한 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법이 허술하다"는 취지의 해명 을 내놨다.

광주시 북구 관계자는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 주체가 '교통행정기관'으로 돼 있는데, 점자블록 도로에 대한 교통행정기관이 규정돼 있지 않으니 단속 권한도 없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각장애인들은 "법이 만들어지고도 아무런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법 개정 당시만 해도 '시각장애인들의 숙원 이 해결됐다'고 반겼는데, 지자체가 무관심해 지난 1 년 동안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중증시각장애인인 오병인씨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점자블록인데, 정작 통행하면서 안 보이는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봉)와 PM 등에 무릎을 부딪히 고 넘어지면서 차도로 떨어질 뻔한 일도 비일비재하다" 며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는 길이 온통 장애물 투성이 인 데다 나홀로 불편하다고 신고하기도 마음에 걸려 불편 한 채 살고 있다. 단속 주체도 시민도 경각심을 가져 줬 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15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옆에 구조물이 세워져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그녀의 '가스라이팅' …결국 살인 불렀다

남성 2명 현혹해 금품 갈취하고 50대 여성 폭행 지시 숨지게 해 시신 4개월 유기…3명 구속 송치

채무관계에 있던 50대 여성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에 유기한 50대 여성이 수년 동안 가짜 신원을 대며 무속인 행세를 하고 공범, 피해자 등을 '가스라이팅' 해 폭행을 지시하고 금품을 갈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안경찰은 15일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A(여· 56)씨와 공범 B(59), C(51)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15일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목포 시내를 돌며 피해자 50대 여성 D씨를 차량에 태운 채 "돈을 마련해 오라"고 강요하며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공범인 B·C씨와 피해자 D씨를 대상으로 수년에 걸쳐 '가스라이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가스라이팅은 상대의 심리를 조작해 상 대방이 자신을 불신하고 가해자에게 의존하도록 만 드는 심리적 학대 행위를 가리킨다. B씨는 개인택시 기사, C씨는 대리운전 기사로 A씨와는 각각 택시와 노래방에서 만난 사이로 파 악됐다. A씨는 이들에게 "좋아한다"고 말하며 현혹 한 뒤, "말을 듣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겠다"는 식으 로 압박하며 종속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나이를 39세라고 속이고, 결혼 전력도 숨기며 미혼인 B·C씨를 현혹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에도 "시신을 암매장할 땅을 사야 한다"며 B씨에게 2000만원을 받아냈고,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인 지난 5월 16일에는 D씨를 차에 태우고 목포시 일대를 돌며 지인으로부터 돈을 구해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D씨가 돈을구하지 못하자 B, C씨에게 D씨를 폭행할 것을 지시해 숨지게 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A씨 등은 숨진 D씨의 시신을 비닐로 감싸 차량 뒷좌석에 4개월여 동안 방치했고, A씨 일당은 무 안군 한 마을 공터에 차량을 세워둔 뒤 넉 달 동안 은폐해왔다. 이들은 창문을 가리거나 소독제를 뿌 리며 흔적을 감추고, 자수 우려에 서로를 감시하며 합숙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 기자 jiggi@kwangju.co.kr

법원, '여제자 성추행 혐의' 전남대 교수 탄원서 못 내게 한 까닭은

"2차 가해 될 수 있다" 경고

여성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대 교수가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다 "2차 가해를 하지 말라"며 재판부 제지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대 예술대학 A(54) 교수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교수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식당, 공원 등지에서 여제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는 법정에서 "격려와 친목 또는 감사의 표현이었으며, 추행 고의가 없으며 사회 상규상 용인되는 수준의 신체 접촉이었다"는 취지로 혐 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재판부가 A교수에게 "탄원서를 더 이상 제출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A교수는 재판에 앞서 대학 관계자 등으로부터 '피해 여성들이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같 은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행위 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탄원서를 받기 위해 피해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며 말을 전달한 다면 이는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A교수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열릴 예 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남대 대학원생 사망' 갑질 의혹 연구교수 입건

광주경찰, 강요 혐의로

전남대 대학원생이 갑질을 호소하며 숨진 사건 과 관련, 경찰이 '갑질 가해자'로 지목된 계약직 연구교수를 입건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8일 전남대 계약직 연구교 수 40대 A씨를 강요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 혔다.

경찰은 사망한 대학원생 B (24)씨 유족들이 제기한 '갑질' 의혹과 관련, A씨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입건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노트북, 연구실 태블 릿 PC 등을 포렌식 검사를 거쳐 통화 내역, 녹음 등 총 180GB의 자료를 확보해 B씨가 피해를 호 소해왔던 점과 관련된 자료를 선별, 구체적인 내 용을 확인해 왔다.

또 다른 갑질 가해자로 지목된 지도교수 30대 C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 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B씨는 지도교수와 박사(연구교수)에게 과중한 업무를 지시받고 갑질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후 지난 7월 13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생활관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